

同社は 지난 30년간 국가기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을 생산 판매 왔으며 최근에는 난방배관용 XL-PIPE를 생산, 판매해온데 이어 열수축관, 자동차 배선용관, 조사기기선등 특수제품 개발에도 성공하여 사업부분의 확대를 가능케하고 있어 더욱 전망이 밝으며, 현재 매출액의 15%인 수출비중을 95년말 4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KOEMA 消息 ◆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세미나 성황리 마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부조달확장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韓電 조달시장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련업계 및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韓國電機工業振興會가 9月 15日 오후 2시 한국종합전시장 3층 소회의실에서 120여명의 重電業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重電산업의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선 상공자원부 이재훈 다자협상과장은 우리나라의 정부조달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나 기존 가입국 조달 통계에 의하면 전체조달중 국외조달의 비중은 (EC, 일본의 경우 0.5%미만) 극히 미미하다고 전제하고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는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나 重電機부분 등 일부 정부구매 비중이 큰 업종은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인한 파급영향이 여타 업종보다 클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업계의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전력분야는 정부조달협상에서의 핵심분야로 각국의 관심이 매우 높아 금번 GATT/정부조달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미국, EC등 주요국으로부터 양자적인 개방 압력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아 이 분야의 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 金在駿 박사는 우리정부가 '92. 6월에 韓電을 제외한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미국 및 캐나다에서 한전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최근 미 EC간 중앙정부, 전력의 물품, 서비스, 건설시장 개방 합의에 따라 한전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韓電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개방의 충격도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韓電의 경우 총 조달액 3조원 가운데 개방되는 부분은 2조 3,000억원(하한선 이상 양허액)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시장 장식액도 상당부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정부조달시장 현황과 미국, EC, 일본등 주요국가의 重電機분야 정부조달 장벽 및 조달제도, 시장별 진출방안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대한무역진흥공사 李鍾建 국제경제과장은 우리의 대응방안으로써 각국의 양허기관 현황 파악 및 입찰정보 입수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과 重電機器가 건설수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 해외 건설업체와는 연계로 重電機器제품의 수요창출과 수출증대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법인 설립에 의한 해외진출과 합작법인 설립등도 적극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구매입찰시 구매공고 이외의 낙찰업체 선정 기준이 되는 요건의 충족과 구매기관의 구매별 수요특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비강제적인 표준에 대한 지식습득도 필수를 가결한 요소임을 지적했다. 상공자원부 이재훈 과장은 우리 업계에서도 이제는 과거처럼 관행적인 수익계약이나 비경쟁적인 요소로도 입찰에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특히 금번 양허안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해도 향후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전력, 통신등 중요한 시장은 다지뿐만 아니라 쌍무적으로도 시장개방 압력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달시장은 더이상 국내업체만의 시장이 아니라는 환경변화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제는 우대정책을 사용할 수 없고 조달기관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계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전업계 대표들은 정부조달 개방에 있어 전력생산 기관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民營회사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협정가입국중 韓電과 유사한 기관을 양허한 예는 없다고 주장하고 우리 重電산업은 내수, 판남 위주로 성장한 관계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니 민공 업계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제도적 대응책 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정부도 GATT 정부조달협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조달 관련 규정을 제정비,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韓電 양허가 불가피하다면 UR협상 결과 새로 개방되는 유동시장, 통신시장, 금융시장

등의 경우 국내 시장 보호조치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처럼 韓電 개방의 경우도 우리 업계가 국내업계 보호방안 마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주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협정적용 대상이 되는 조달금액의 하한선도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되도록 하한선을 인상하여 협상에 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韓電 李宗勳사장 초청 懇談會 開催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重電機器 대수요처인 韓國電力社私 李宗勳사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韓電에서 우리 重電業界 발전을 위해 '91년도에 660억원의 중전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93년도에 30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으며 특히 업계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한전 구매제도 개선은 물론 中小企業 기술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93~'97년까지 총 1,120억원 상당의 각종 기술지원을 해주는 등 우리 중전업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전지원사업에 대한 대업계 홍보 및 업계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에서 전기공업진흥회가 전기기기 제조업계와 대수요처간의 자리를 마련케 되었다.

- 일 시 : '93. 9. 17(금) 07:30
- 장 소 : 무역회관 51층 다이아몬드룸
- 참석대상 : 25명 내외
 - 단 체 : 진흥회 회장, 전기·전선·용접·전지·산업로조합 이사장,
대한전기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사협회 회장
 - 업 계 : 국내 중전기업계 대표자 16명